

## 문화산책

## 행정통합·미래산업, 시민으로 완성되는 광주

윤 익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전라남도와의 행정통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광주는 연구개발과 인재, 데이터와 기술이 모이는 도시다. 반면 전남은 에너지 자원, 농수 산업, 산업단지, 넓은 부지와 실증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두 지역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각자의 강점을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통해 하나의 산업권으로 움직이면, 광주는 기술 중심 도시로, 전남은 확장과 실현의 공간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다. 이는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복 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안겨준다.

AI산업은 이러한 통합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이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전남은 가진 농업, 어업, 에너지, 환경 데이터는 광주의 AI 기술과 결합될 때 새로운 산업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다. 스마트 농업,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재난 예측, 공공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AI 활용 사례다. 이는 단지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변화이다. 모빌리티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자율주행차와 미래차 기술은 실제 도로와 다양한 환경에서 실증이 중요하다. 광주의 미래차, 자율주행 기술은 전남의 광활한 도로 환경, 항만·공항·물류 인프라와 결합될 때 실증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서남권 전체를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산업 플랫폼으로 만드는 기반이 된다.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교통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높여 시민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반도체산업과 헬스케어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을 지향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연구와 기술, 인재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에너지와 물류 환경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자리를 만들어낸다. 헬스케어산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의료, 돌봄, 데이터 관리 등 폭넓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AI와 결합된 헬스케어산업은 광주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산업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바로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가?’ 하는 문제다. 행정통합과 산업 육성이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경년에게는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야 하고, 중장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노년층에게는 의료와 돌봄의 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통합은 산업뿐 아니라 생활 인프라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교통망, 교육과 문화시설이 광역 차원에서 연계된다면 시민의 생활 반경은 넓어지고 선택지는 많아진다.

출퇴근 시간 단축, 의료 이용의 편리함, 자녀 교육의 환경 개선은 행정통합이 시민의 삶에 주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다. 우리가 말하는 ‘부강한 광주’는 단순히 예산 규모가 커진 도시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이다. 산업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통합은 그 수단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구조가 된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장밋빛 미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통해 시민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지금 필요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상상이며, 미루는 태도가 아니라 준비된 결단이다. 미래 산업과 시민의 삶이 함께 성장할 때, ‘부강한 광주’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 기고

## 낯섦을 시민으로 바꾸는 도시, 광주를 떠나며…

길강목

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행정학 박사

그렇게 같은 길을 되짚은 횟수만도 서른 차례를 넘는다. 그때마다 나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종단 자국이 남은 외벽 앞에서는 민주주의가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선택이었음을 말했고, ACC의 옆 린 광장에서는 광주가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 대화하는 도시임을 설명했다. 전일빌딩의 상흔과 망월동의 고요, 그리고 ACC에 흐르는 일상의 풍경은 행정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묻는 무언의 교과서였다.

광주는 늘 ‘국기란 무엇이며 시민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쓰게 했다. 이 도시에서 어떤 행정은 저출산의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을 넘어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과제와 마주한다.

지난 1년,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새로운 시민을 맞이했다. 그 순간은 서류를 건네는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협연 중심의 공동체를 넘어 책임과 가치의 시민공동체로 확장되는 장면이었다. 민주화의 급이마다 청년과 시민이 함께했던 광주라는 공간에서 국적을 수여한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한 선언처럼 다가왔다. 이는 종양의 제도와 지역의 실천이 맞물리는 Governance(governance)의 현장이었다.